

“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 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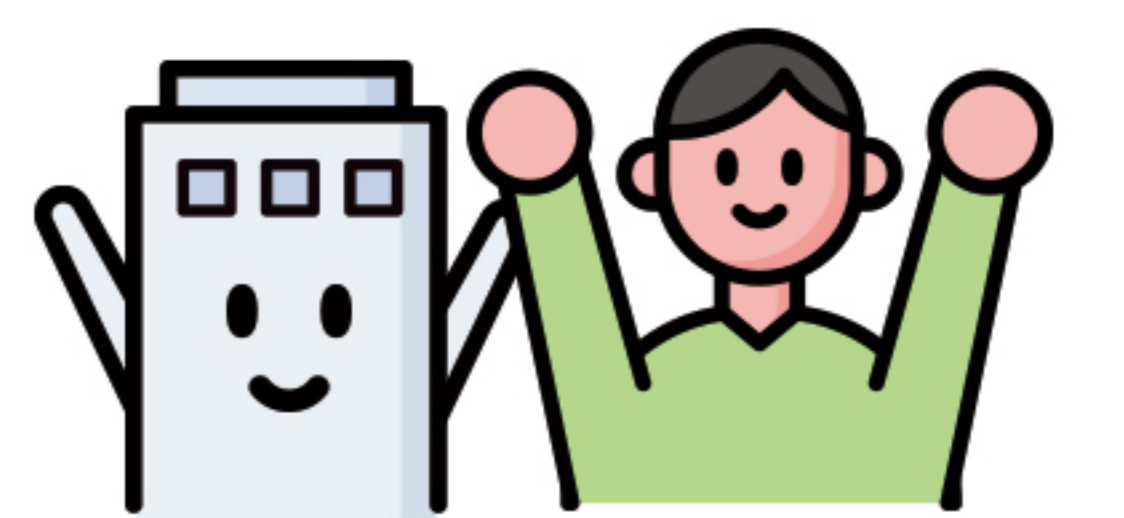
행정조사 정비방안

불합리한 행정조사 77건 정비·개선



불합리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·기업의 부담과 불편 존재

77건의 행정조사 정비·개선으로 국민·기업의 부담 완화



① 필요성·실효성 없는 행정조사, 폐지·통합·축소

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

현행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, 해양경찰청 지방청의 조사와 해양경찰청 본부의 서면심사를 이중으로 실시

개선 본부의 서면심사를 폐지하여 중복조사 방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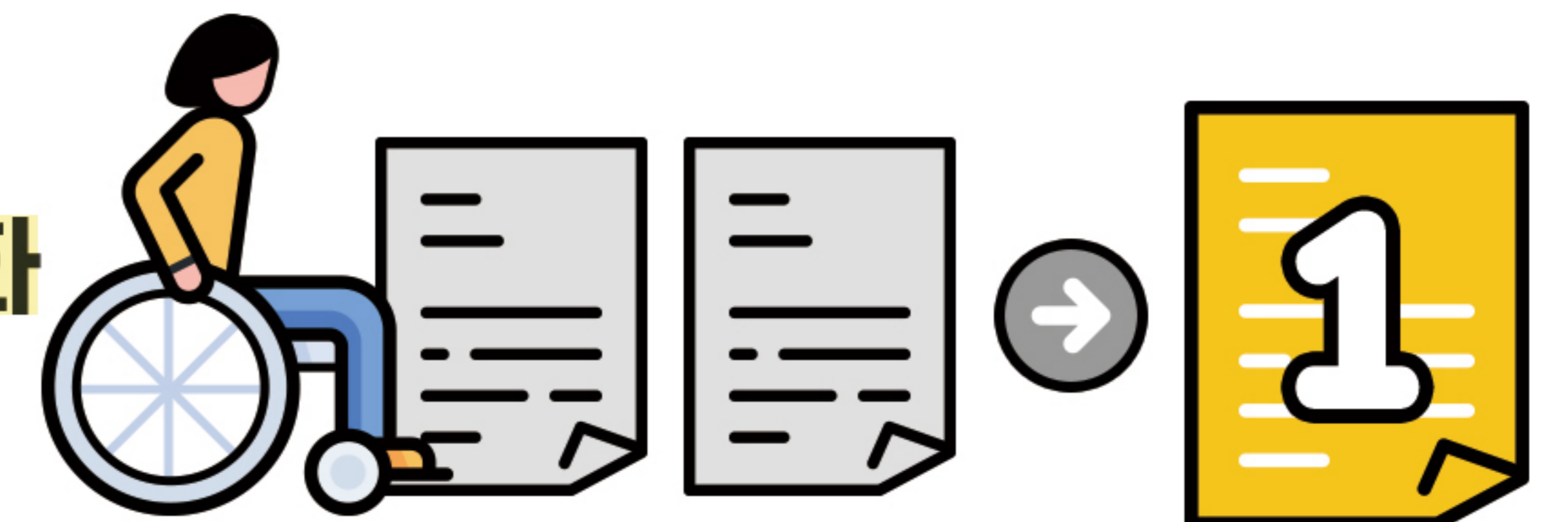
* 23년 상반기 개정 예정

② 조사방식 개선 (조사 횟수 완화, 조사 주기 연장 등)

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

현행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(상시 50인 이상)는 장애인 고용계획과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

개선 연 1회로 완화



*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

③ 행정조사 실시 근거·방법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

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

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부재, 위반자 처벌규정만 존재

개선 관련 법령 개정으로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(토지 및 건축물 등 출입·조사 등)



* 23년 12월 개정 예정

④ 과도한 행정제재 완화

원가·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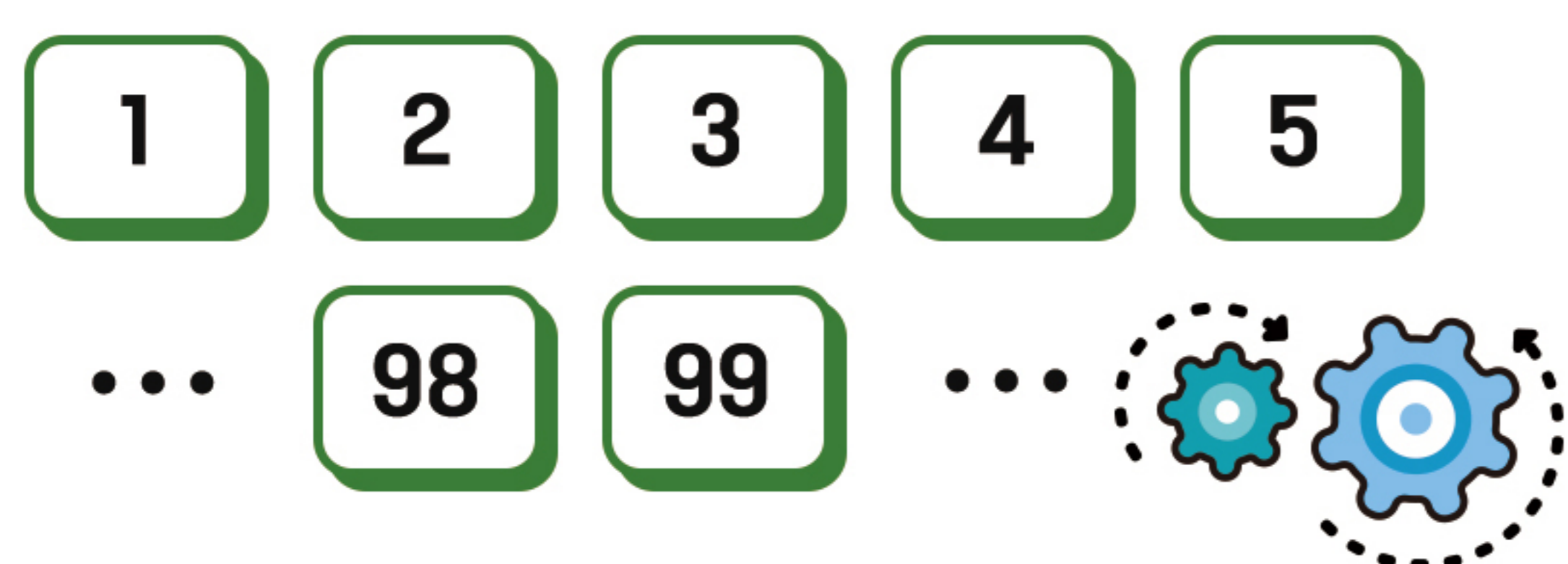
현행 검사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개선 행정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



* 23년 개정 예정

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 마련



수 행정조사에 통합 연번을 부여하여 체계적 관리



행정조사의 유형 분류 (조사목적·필요성, 행정규제 有無 등) 및 유형별 정비방안 마련



행정조사 담당자 교육 및 안내서 제작·배포